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 정경희



목 차

개회사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
----------------	---

발제

1.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9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 김경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토론

1.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31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문	
-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	
2. 교육개혁,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37
- 오세목 前 중동고등학교 교장	
3.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47
- 권혁제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인사말



개 회 사



정 경 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정경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일 년 전,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새 정부 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붕괴시키다시피 한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귀한 제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정치도구화 되어버린 교육의 본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러가지 당부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난 5년간 곤두박질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우리 아이들을 좌편향 교육, 정치편향 교사로부터 보호하는 것’, ‘文정권이 무너뜨린 교육의 ‘공정성’, ‘다양성’, ‘자율성’ 원칙을 되살리는 것’, ‘대학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 이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혁’을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년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발표, 8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발표, 9월 ‘유보 통합추진준비팀’ 발족, 10월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발표,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올해 1월 〈교육개혁 10대 과제〉 발표, 2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등 교육개혁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주간 뉴스가 윤석열 정부의 1년 성적표로 채워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을 얼마나 나아갔는가’라는 질문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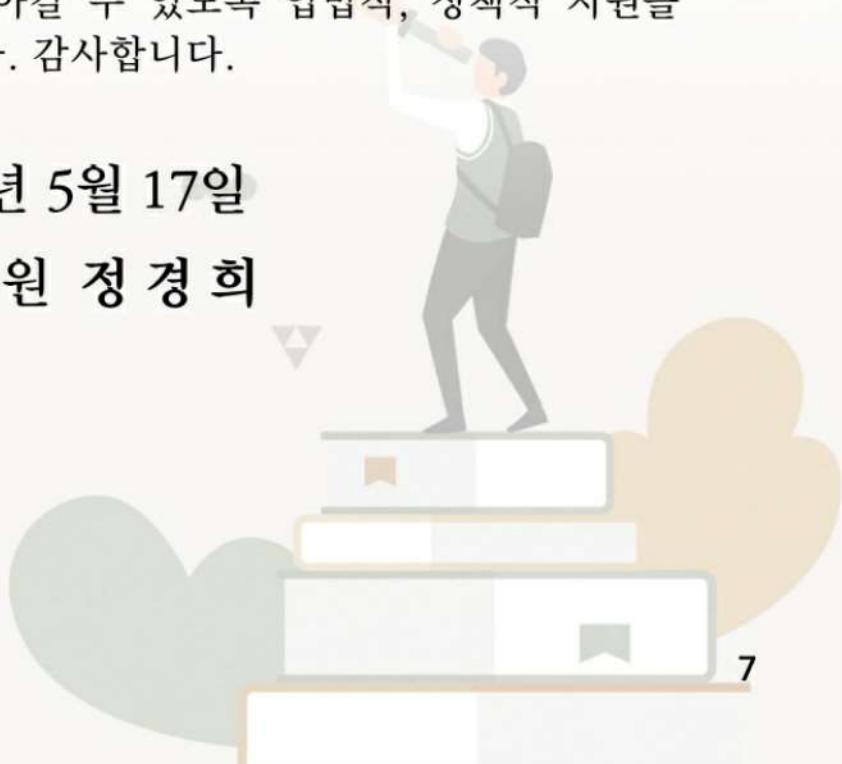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라는 절박한 정치적 상황도 반드시 타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가는 열띤 토론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자극이 되는 동시에 힘을 불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회의원 정경희



발제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 경 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 경 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1.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특징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국가 독점에서 탈피하여 다양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한 점을¹⁾ 볼 때, 교육 난제들을 자유와 다양성에 기반해서 풀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으로 읽힌다. 이 교육개혁을 담당할 교육부 장관 인선은 진통을 겪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교육정책을 주도한 이주호 장관을 다시 등용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라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1-1. 윤성열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의 특징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그 동안 발표된 여러 정책들과 조치에서 엿볼 수 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19.),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2.8.22.), 유보통합추진준비팀 발족('22.9.14.),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22.10.11.),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22.12.24.), 교육부 조직개편 ('23.1.1.), 교육부의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2023.1.5.)의 교육개혁 10대 과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2023.2.3.),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1.)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4월 19일 개최한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²⁾”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3 미래사회 교육컨퍼런스(4.22)”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정책 등 3대 개혁정책을 우선 추진할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지난 1월 5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10대 핵심정책을 시습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3대 우선과제로 압축한 것이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확대

1) 경향신문(2023.1.6.) 윤 대통령 “교육도 서비스, 국가 독점교육 안돼”

2) 교육부 보도자료(2023.4.19.)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하여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초·중등에서 코딩 교육을 확대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 ‘대학 개혁’으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하고,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과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대학 내 ‘벽 허물기’ 규제 제거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 정책에서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역점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을 산업으로 보고 수요자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조한다.

산업계 인력수요 맞추어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치열한 국제경쟁하에 있는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부 주관 범부처 ‘인재양성 방안’ 수립·발표하고, 첨단분야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사업 신규 편성·증액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 1,829명 늘었고, 23년 만에 서울대 218명 등 수도권 대학에 817명이 2024학년도에 증원된다³⁾. 영유아 돌봄·교육의 질은 높이고 서비스 확대도 가정 맞춤교육의 일환이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확대한다.

둘째,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을 확대하되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와 대학육성책임을 국가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총 9.74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대학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1.7조 증액하여 되었다.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고,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도모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주로 재정지원을 매개로 지자체와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

3) 중앙일보(2023.4.28.). 반도체·AI학과 1,829명 증원...수도권대 817명, 23년만에 늘어

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과 글로컬(Glocal)대학 사업이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30개 안팎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일반·교육·산업·전문대학 약 220곳에서 14%인 30곳 안팎만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다. 2025년부터 교육부가 지원하던 5개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AI 등 에듀테크를 통한 학교현장의 수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육하면 학생 수준과 진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격차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초·중등에서 코딩 교육을 확대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기반(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한다.

네번째, 규제혁신을 통한 대학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촉진이다.

총 정원 내 학과 신설·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신규 캠퍼스 설치 및 대학 통합 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대학규제 제로화 추진한다.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23. 대학 8,057억 원, 전문대학 5,620억 원) 집행 시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한다.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여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 시기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면 통합한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다⁴⁾.

초중등 분야에서는 교육자유 특구를 지정하여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관련 표준형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 있는 학교를 운영도록 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4) 교육부 보도자료(2023.4.26.)대학이 학생·산업 수요를 학사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사 자율성 확대

1-2. 세부 정책 수립·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대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과 함께 일몰되어 지속가능성을 보장되지 않고,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지원한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이름을 달리하여 개편되었다⁵⁾. 또한 막대한 재정을 투자 수반한 정책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컨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정하여 각종 지방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시작하여 5년 간 약 1조 2,000억원 예산이 투입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과 2014년부터 5년간 약 1조 2,000억원 지원된 대학특성화사업(CK)은 우수 인재 지방대 유입,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지역 정주로 유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혁신 및 성장 도모라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⁶⁾.

둘째,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대학규제 철폐 약속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악성 규제인 대학등록금 통제를 풀지 않고 있어서 대학규제 제로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 작년에 4년제 17개 대학이 정부재정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였다.⁷⁾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재정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80%가 운영수지(운영수입-운영비용)가 적자로 대학의 교육여건은 악화되고 있다.⁸⁾

셋째, 연관된 정책 들 간의 정책 조합(policy mix)으로 정책 효과를 높인다.

예컨대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이공계기피 현상을 해소해야 성공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도 학력평가를 통한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험을 쳐 각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5) 박주호(2022). 한국교육정책 논평. 박영스토리.p. 260

6) 감사원(2021.7.15)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감사원(2022.3.17)은 교육부의 "대학과 지역 일자리 연계사업"의 성과 감사에서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성화 학과를 선정하고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학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함.

매일경제(2022.3.18.) 3조 쓸어부었지만...지방대 특성화사업 헛바퀴

7) 중앙일보(2023.5.1.). 정부 동결요청에도..4년제대 17곳 결국 등록금 올렸다.

8) 한국경제(2022.6.9.) 고대 -234억, 이대 -138억...14년 묶인 등록금에 사립대 80%가 적자

개별적으로 교육하면 된다. 지방대 육성책도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추진되는 ▲ 적극적 우대정책, ▲재정지원, ▲지자체-산업체-대학 협력강화 정책은 보완하여 계승하되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여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과 소통 강화와 정책대상자 설득 노력이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로 홍수처럼 쏟아져나오는 낯선 개혁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찾아볼 수 없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부 대학의 총장·기획처장들만을 상대로 하는 제한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할 수 없다. 교수신문이 전국대학교수 622명 설문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학개혁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학 행정·재정지원 권한 이양’ 정책에 대해 대학교수들은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⁹⁾. 현 정부에 들어와서 현장 의견수렴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였다가 철회하였고,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추진도 교육계 반발로 추진을 보류하여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신뢰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¹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교육부가 독점권을 행사하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저항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선 발표 후 수습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개혁 조급증을 버리고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노력¹¹⁾을 기울여야 교육개혁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한다.

디지털 기반 학습 플랫폼은 만능도구가 아니며 학생 특성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학습이 뒤지고 학습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에듀테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경우 사고력을 키울 수 없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퇴화된다¹²⁾. 정책이 유행만 좋지 않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에 국가의 교육정책 역량이 과도하게 쏟아

9) 교수신문92023.4.11). 규제완화기대..지방대정책은 졸속

10) 동아일보(2023.4.22.)사설. 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11) 한국일보(2023.5.1.). 백년대계를 의견수렴없이? 교육개혁 조급증 버려라

12) 김동호(2022). 학생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제영 외 “이슈중심의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p. 146

붓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협업이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되고 있고, 교육부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³⁾ ‘교육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9월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다. 교육부가 독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갈등하는 정책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맡도록 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토록 한다.

2. 윤석열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저항

2-1. 한국교육학회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정책 긴급 진단”

지난 4월1일 한국교육학회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정책 긴급진단” 정책포럼이 열렸다. 광주교대 박남기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학생 맞춤형 교육’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 구축’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는 ‘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자유특구’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협약형 공립고’로 이름을 달리하며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¹⁴⁾ 또 ‘교과서 선진화’는 ‘디지털 교과서’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으로,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은 ‘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으로 바뀌어서 재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였기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가가 교육 정책을 독점하고 다양한 교육개혁안이 관련 집단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급히 발표돼 저항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집단 구성원 강의 관점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2023업무보고에서 밝힌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¹⁵⁾ 우선 정책계승보다는 정책단

13) 경향신문(2023.3.23)백년대계 만든다던 국가교육위…교육정책 ‘운전대’는 아직도 교육부에

14) 박남기(2023). 윤석열정부 교육개혁 방향과 절차의 특징 진단 및 대안. 한국교육학회 2023년 제3차 교육정책포럼(2023.4.1)

15) 김성천(2023). 윤석열정부의 10대 교육개혁정책의 유형과 쟁점분석. 한국교육학회 2023년 제3차 교육정책포(2023.4.1)

절과 변경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거나 방점을 두었던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하거나 축소한 대표적 사례로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을 들었다. 그 밖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추진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과단성을 보이며, 시장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교 육학자 답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와 에듀테크가 들어오면 교육의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 지자체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 인가? 규제완화를 포함한 자율화가 자칫 부실 사학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기존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서 정책을 일몰하였는가?

2-2. 포럼 사의재 주최 “윤석열정부 교육정책 평가”

포럼 사의재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단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가 4월 25일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반상진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1년에 대해 “키워드로 본다면 난맥상”이라면서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교육계 갈등 증폭 전략을 통한 이명박 정부 정책 회귀”라고 총평했다¹⁶⁾.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출범한 ‘포럼 사의재’의 성향에 부합되게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옹호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대한 혹평을 쏟아 냈다. 교육자유 특구 정책에 대해서는 “성적 중심의 학교 서열화, 귀족학교 정당화로 시대착오적인 성적경쟁 체제를 만들고, 이는 공교육을 경쟁 도가니로 몰아 넣 것”으로 내다보았다.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개혁 철회 요구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문(2023.3.29.)¹⁷⁾에서 “교육의 훼손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전 정부 때 실효성이 없어 폐기되고 묵혔던 정책들을 이주호장관을 앞세워 다시 되살리고, 디지털, AI, 글로벌, 늘봄, 유보통합, 일제고사 부활, 교육자유특구 등 교육 대전환이란 미명으로 알맹이 없는 온갖 교육 정책들을

16) 오마이뉴스(2023.4.25.). 윤석열정부 교육정책, 아마추어 정부의 MB시즌2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2023.3.29.) 윤석열 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는 무시한 채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졸속행정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에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 ‘AI 기반 교과과정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라는 뜬구름 잡는 정책들을 발표하여, 오히려 디지털, 에듀테크와 관련된 사교육 주가만 올리는 교육 시장화 전략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온갖 교육 정책들로 학교 현장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되어 공교육의 신뢰성을 교육부 스스로가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5월 전국교사대회와 7월 총파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

교육 3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는 10대 교육개혁 정책, 22개 세부 정책을 5단 척도로 평가하여 지난 2월 20일 발표하였다¹⁸⁾. 우리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A)을 미치는 정책 항목은 하나도 없고, 긍정적인 영향(B)을 끼치는 정책으로는 5개, 변화 없음은 5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2개 (+1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5개로 평가하였다. 긍정적 영향(B)을 미치는 정책으로 ■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추진을 들고 있다. 부정적 영향(D~E)을 미치는 정책으로 ■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6개 세부 정책의 잘못된 연계 ■ 수능 상대평가 ■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외고 내 , 일반고 내 유형별 학교 형태 세분화) 등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 (대학)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 (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 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이양 ■ (초중고) 학교설립~운영 교육 규제 완화,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등을 선정했다.

총괄적으로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제외하고,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3.2.20.).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2-5.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의 라이즈·글로컬 사업철회 요구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차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과 소위 ‘라이즈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글로컬 대학’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칠 실질적인 대학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1차 시국선언에는 3,298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서명하였다¹⁹⁾. .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놓인 대학에 시장 원리와 무한 경쟁이라는 낡고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며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 라이즈(RISE)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은 이미 극도로 심각한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²⁰⁾.

요컨대, 교수연대회의는 현 정부의 라이즈·글로컬대학 등 지방대 살리기 지원책이 오히려 지방대 살생부라고 반발한다.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소수 대학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글로컬대학에 선발되지 않은 대학은 2류대학으로 낙인찍혀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이즈사업은 지자체가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사업인데,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교육부가 지방대 지원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으로 의심한다²¹⁾.

2-6.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생산적 논의 필요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2023년 업무 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쟁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 독점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말했다.²²⁾ 이 발언은 경쟁을 사회 악으로 치부하는 진보·좌파 교육진영이 동의하기 어려운 교육정책 이념이다. 진보

19) 대학지성(2023. 4.20). 교수·연구자 3천여명,尹 고등교육 정책에 '반대' 서명…1차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

20)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 사회적 공론화 없는 글로컬대학 사업 등 졸속한 고등 교육정책 규탄 기자회견문. 2023.4.18

21) 한겨례(2023.5.5.) 교육부 지방대살리기라는데, 정작 지방대는 선정안되면 나락·

22) 동아일보(2023.1.6.).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좌파 교육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저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념 차이에서 오는 이데올로기 대결을 넘어서 정책주도 세력에서 멀어지는 대서 오는 상실감을 표출이다. 진보 좌파 교육세력들은 경쟁을 죄악시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지 성찰하면서 진영 논리에 벗어나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3.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²³⁾

3-1. 교육개혁의 기조(지향점)

4차산업 혁명과 저출산이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윤석열정부에서는 자유와 공정, 그리고 다양성 가치 위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하면서 다양성을 띠는 교육이 추구하는 원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원칙은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다.

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 만드는(인성)”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쉬운 교육’을 추구하여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무(無)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로봇과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무(無)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탄탄한 기본학력을 토대로 창의성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암기는 교육의 기본이고, 창의성은 지식 많아야 꽃이 핀다. 학생의 흥미와 자기주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강제로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 시험은 곧 공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은 교육에서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 지겠다’는 구호 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죽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나친 국가 주도로 인해서 학교의 자기 결정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유모 정부(Nanny State)’에서 탈피하여 교육당사

23) 자세한 내용은 발제자의 저서(2022)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를 참고

자들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교육자에게는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에서 재량이 주어지며 자신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교는 학생들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한다.

셋째 원칙은 공정한 경쟁으로 실력주의 확립이다.

진보·좌파 교육 인사들은 경쟁을 혐오하고 협력과 연대교육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성적 등급, 포상 제도, 수업 관행들을 거부하고 경쟁의 대안으로서 '협력학습'을 제안한다. 경쟁은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믿는다.

모든 학생이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 규칙이 합리적이어서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으면 경쟁의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능력주의가 설 수 없다. 교육에서는 능력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富)가 주어지는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을 학교에서 길러준다.

혹자는 능력주의는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라고 비판한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고 감성에 호소한다. 능력주의 대신에 결과 평등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능력'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장밋빛 평등주의 수사(修辭)보다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힘써야 한다.

넷째 원칙은 교육의 다양성이다.

한국에는 오직 한 종류의 학교만 있다고 지적받는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체제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결핍된 '붕어빵 교육'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다. 단일성과 평준화를 추구해온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성 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다. 우선 학생의 서로 다른 학습능력, 관심과 흥미의 차이, 학습방식의 다름 등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알아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를 포용하고 학습한다. 흥미, 관심, 문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현대 민주주의의 철학 중 하나이기에 교육제도는 이를 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공급자의 책무성을 높인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학교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지속할 수 있기에 고객지향

성, 경쟁지향성과 성과 지향성을 띤다.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면 교육의 획일성은 불가피하게 된다. 학교에 가해진 공적 규제를 풀고 사학에게 운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교육의 다양성은 꽃 피울 수 있다. 공교육 밖의 교육활동도 인정하는 개방성이 우리 교육을 건강하고 다양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월성 교육으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다.

인구절벽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적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데도 주력해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어 첨단산업의 성패는 초격차를 이끌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6월 7일 국무회의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 있다”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특출난 영재보다는 평균이 높은 범재들만 키워내고 있다. 그 예로 영재교육의 양적·질적 하락세에 있다는 평가이다²⁵⁾. 영재학교·영재교육원에 등록한 학생수는 10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실력도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영재·과학고 교사들은 진단한다.

우리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대학의 연구력은 이에 훨씬 뒤진다. 논문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 영향력 지난 2022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HCR)의 수는 63명으로 전 세계 총 22개 분야에서 선정된 6,938명의 연구자의 약 1%에 불과하다. 이는 최대 HCR 배출 국가인 미국(2764명)이나, 뒤를 이은 중국(1169명)과 영국(579명), 독일(369명), 호주(337명)에 비해 매우 뒤지는 숫자이다. HCR 최다 기관은 미국 하버드대(233명)이고 중국 과학원(228명), 미국 스탠퍼드대(126명), 미국 국립보건원(NIH, 113명)이 뒤를 이었다²⁶⁾.

이제는 평등 교육에서 수월성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학과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도록 공교육에서 지원한다. 예술과 체육(전국 10개)은 중학교 과정 영재학교가 있으나 과학분야는 방과 후에 영재교육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분야도 중학교 시절부터 영재를 발굴하여 키울 필요가 있다. 과학고(전국 20개)에 과학중학교 과정을 부설하

24) 한국경제(2022.6.8.) 반도체 인재 강조한 윤 “교육부도 이젠 경제부처라 생각해야”

25) 매일경제(2022.6.20.) 평균의 함정에..영재 못길려내는 한국교육

26) 서울경제(2022.11.16.) '2022 상위 1% 연구자'에 UNIST 10명…국내 최다

여 조기에 영재를 발굴하여 성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만 있어서 전국에 8개 영재고등학교가 있다. 법률상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도 지정될 수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 고등학교 과정만 지정했기 때문이다. 중학교 과정의 영재학교를 영재고등학교에 병설한다.

3-2.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이 절실한 사유로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²⁷⁾”를 들고 있다. 교육현장과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으며 시대흐름을 재대로 읽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지체되고 있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은 한마디로 ‘혁신교육’으로 부를 수 있다. 혁신교육은 한국교육의 가장 큰 병폐를 점수로 줄 세우는 ‘경쟁 교육’의 탈피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경쟁교육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또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평등교육을 추구하고 힘든 공부는 피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중시한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촌평²⁸⁾에서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념 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펌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 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 아닌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등이 대표적 청산 과제라는 지적이다.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無 혁신교육을 폐지하고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한다.
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 만드는(인성)”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쉬운 교육’을 추구하여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무(無)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로봇과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무(無)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지금 학생들의 학력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국단위 학업성취 평가와

27) 대한민국정부(2023.5).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복원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p.12

28) 한국교총 보도자료(2022.6.2.)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심판”,

PISA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공부 안 시키고, 덜 가르치는 혁신교육(쉼교육)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학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고, 학력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22.10.11.)을 발표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파악하여 별도 학습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8개 시도교육청이 학력평가 금지를 담은 단체협약을 전교조와 맺어서 학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⁹⁾.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7월 초·중학생 학생성장평가를 실시하여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이나 전교조 강원지부와 참학 등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일선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막고 있다³⁰⁾. 작년에 초중 60.2%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강원도 학력평가에서 중학생 절반이 수학 50점 이하 성취도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으나³¹⁾, 전교조 강원지부 등은 학력평가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전교조와 협약으로 인해 전북고교 1학년은 지난 3월 23일 전국 고등학교생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³²⁾.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되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 않으면 학력 최상위국가에서 추락하여 인재 경쟁력이 뒷걸음칠 것이다.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서민층 자녀들이 그 피해를 제일 크게 입는다.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無) 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 지식교육을 멀리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을 학력향상지원법으로 대체하여 수준별 수업과 유급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의 학력향상지도 노력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29) 조선일보(2022.10.21.) 학력평가 금지·지양 단체협약. 교육청8곳이 전교조와 맺었다.

30) 한국일보(23.3.14).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올해 또 갈등 빛나

31) 교육플러스(2023.1.5.). 중3 학생 절반 수학 50점 이하..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 '충격'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5>

32) 조선일보(23.3.29). 전교조와 협약 탓. 전북고교 1학년만 전국모의고사 못봐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시키고 자율을 확대한다.

2020년 2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30년 이상 우리 사회 고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전국의 자사고(42교), 외고(30교), 국제고(8교)는 정권의 적폐세력으로 몰려 일반고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사채용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완전한 자율을 누린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민에게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유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성숙도의 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박순애 전 장관은 자사고는 존치시키고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샀지만, 이주호 장관은 ·외고의 존치를 공식화하여 혼란은 사라졌다. 자사고·외고 존치를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사학 공영화’정책을 버리고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한다.

지난 정부는 진보·좌파 교육감과 손잡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내세워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공립에 준하여 강화함으로써 사학의 운영의 자율성의 폭을 대폭 줄였다.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내세워 사학경영자의 인사·재정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1차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강제 위탁토록하여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학의 학교경영권이 학내구성원에게 박탈당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개악된 규정은 원상 복귀해야 한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종전 이사(구재단)에게 정이사 1/2 이상의 추천권을 부여하여 설립자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사립학교도 이렇게 국가가 억압하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³³⁾

33) [내일신문\(2023.3.15.\)](#) 이주호 4대교육개혁 입법 지원해달라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의 편향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2020년부터 고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다루며 남북교류 사업을 미화하고 남북화해 가능성을 낙관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어서 정권 홍보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³⁴⁾. 특히 9종 교과서 다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미화·왜곡하는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³⁵⁾. 한국이 이룬 기적적 경제성장·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깎아내리고, 세계 최악의 실패 가인 북한에는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세계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질서를 넓은 시야에서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역사교육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교육부는 필요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 수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서 국사는 필수과목, 세계사는 선택과목이다. 세계사는 학생의 5% 정도 만 선택하는 기피 과목이다. 미래 세계사의 주역으로 활약해야 할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교육이 ‘세계사 까막눈’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로 교사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0년 중단하고 2021년부터는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였다. 더욱이 평가결과 활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겨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우수평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하고 저평가자에 대한 능력개발 연수는 폐지하였다³⁶⁾. 2019년 능력향상연수를 받은 교사는 170명이 마지막이었다. 교원능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제시 통로로 활용되고, 지원필요 교원에게는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 중 발생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예, 성희롱, 모욕글 등)을 걸러내고 예방할 조치도 필요하다.

34) 조선일보(2023.4.10.).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북경제 안정. 문정권홍보위해 거짓 가르치는 교과서

35) 서울경제(23.4.11). 북 경제 안정..김정은 미화 왜곡 교과서 조속히 수정하라

36) 조선일보(2022.12.13.) 점수 낮은 교사 재교육도 없어져..하나마나 한 교원평가

3-3.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우리 교육발전을 막고 있는 낡은 교육제도를 혁파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규범(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고교평준화, 정부 주도의 대입제도, 연공서열식 교원제도는 개혁하여야 할 대표적인 낡은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 형성된 제도이다. 제도가 시대 흐름에 정합성이 떨어짐을 역대 정부는 인식하면서도 경로의존성의 타성을 젖어 기피했던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생수가 급감하는 시대흐름에 조응하여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상(기득권)을 깨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고교선택제의 도입이다.

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연간 100만 명이 태어나 오전·오후반 2부제 수업을 하던 시절에 탄생하였다. 연간 25만 명이 태어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합한 제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평준화가 명문고를 해체하여 고교 서열주의를 완화하고, 과열 입시경쟁을 줄이는 효과는 거두었다. 그러나 학력하향 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기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크다. 단기적 사명을 딴 태어난 고교평준화가 50년 세월 장수함에 따라 공교육은 무경쟁, 무긴장의 무활성화(無活性化) 늪에 빠졌다.³⁷⁾학교 간 경쟁이 사라져 한국교육은 경쟁력있는 자기혁신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선택제를 제안한다. 광역시별 공동학군(단일학군)으로 하여 학생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반고, 특목고, 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자를 결정토록 한다. 이는 현행 후기 일반계고 배정(교육감 전형)을 폐지하고 학교장 선발 전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생 선발기준은 이원화한다.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자사고·외고, 독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예술고 등)는 중학교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토록 한다. 이는 현재 과학고와 직업계고 선발방식이다. 공립고와 정부의존형 사립고는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토록 하여 자칫 평준화 이전의 입시지옥과 과외 열풍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2025년에 폐지토록 예정

37) 문용린(2008).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

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살려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이뤄야 한다.

둘째,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하고 국가는 진로형 수능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타당한 전형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은 2024학년도에 약 79%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생부 중심 전형은 공정성이나 학생·학부모들의 신뢰 얻는 데 실패하였다. 2022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수능과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수능은 한 종류의 시험뿐이고, 문제 형태가 선다형이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타당한 인재 선발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 수능Ⅰ과 수능Ⅱ의 진로선택형 수능이 최적의 방안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과 학생의 대학 전공에 맞추어 응시하는 수능Ⅱ로 분리한다. 수능Ⅰ(기초수학능력 검사)은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언어·수리 능력을 측정한다. 수능Ⅱ(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는 대학이나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 서·논술형 문항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한다. 입학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만 수능Ⅱ을 요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학생 선발방식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학생 학습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제시하였으나 경쟁의 내용만 달리할 뿐 정책성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대입제도의 주된 가치를 대입준비 과정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대학 수학능력 적격자를 가리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타당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의 모색은 대학의 책임이다. 지성인의 집합체인 대학사회의 학생선발 능력과 양심을 불신하고 정치가·관료가 이끄는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밝지 않다.

셋째, 교원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

교대·사대는 상위권 10% 이내 우수학생을 뽑아 예비교사로 키우고 있다. 중등 예비교사들은 1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교직에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유능한 인재를 교사로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반면, 인사시스템은 우수인력이 교직을 기피하던 시절, 즉 연공과 형평을 중시하여 설계된 교원봉급 체계와

인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체제가 약하고, 경쟁시스템 부재로 사교육에 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준화 인사제도는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원에 관한 보수, 평가, 전보 등 인사제도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교사의 급여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교원성과급 논란을 끝내야 한다. 5년 주기로 근무학교를 바꾸는 순환전보제도 손질하고, 초·중등 연계 교사자격증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제대로 하여 우수교사는 포상하고 연속적 저(低)평가 교사는 교직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사 개혁을 주장하였으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사례를 소개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무능교사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발언³⁸⁾으로 교총·전교조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곱씹어볼 내용이다. 발언의 골자는 교사들의 무사안일과 성과를 보상하지 않는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반성이다. "학교가 시중 학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강사들이 연구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교사들은 도무지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교사 역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능력없는 교사는 자리를 뜨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2010.6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한국교총 회장 출신 이원희 후보는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 10% 퇴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여 교직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³⁹⁾ 최근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은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⁴⁰⁾.

요컨대, 교사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보수와 인사에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구축이 교직 사회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교사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실천이 힘들고 갈등비용이 크므로 점진적이고 세심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38) 경향신문(2001.1.11.) 무능교사퇴출 장관발언 파문.

39) 연합뉴스(2010.4.19.). '교사 10% 퇴출…' 교육감선거 이색공약 속출

40) 연합뉴스(2021.5.18.) 박용진 "실효적 교원평가제로 부적격 교사 퇴출시켜야"

교육정책의 크고 작은 혁신 과제는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를 일거에 혁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 차이로 의견수렴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는 빛의 속도로 변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기저에는 유능한 인재 양성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당사자의 행동과 교직문화를 바꾸는 제도개혁에 치중해 인재강국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토론 1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문**

이 수 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문

이 수 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

1.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개혁 영역과 방향

김경희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교육부에서 제시한 3대 핵심 개혁 과제인 (1) 국가책임 교육·돌봄 (2) 디지털 교육혁신 (3) 대학개혁정책은 미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영역과 과제로 시의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저항’에 대한 의견

아직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거나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학자의 발표문이나 전교조의 ‘투쟁선포기자회견문(2023.3.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 등을 통해서는 학계의 평가나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들 학자와 단체는 주로 현 정부의 개혁과 다른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주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립적인 정치이념에 대한 선호에 기초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김경희 교수께서 전문가 의견의 예를 든 김성천 교수의 지적(교육학회 정책포럼 발제), 곧 ‘현 정부 교육개혁이 지난 정부 교육정책과의 단절 현상, 즉 정책계승보다는 정책단절과 변경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토론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1) 교육정책단절 현상은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2)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외고 등의 일괄 폐지’, ‘혁신교육’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쩌면 가장 두드러지게 정책단절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소송이 잇따랐고 교육부의 자사고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법원 소송에서 연이어 취소되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정책 추진력이 사실상 상실되기에 이르렀지 않았던가! 3) 또,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가치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기존의 문제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단절의 의미로서 교육개혁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육목표와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교원단체 등 시민단체의 예로 든 전교조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들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진영의 교원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의 비판인 ‘이전 정부 때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정책으로의 회귀로 교육훼손이 심각하다’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난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혁신학교, 시험폐지 정책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하락되고 교육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경희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생산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계 상황은 참으로 요원한 일임을 부인하기 어렵지 않은가!

다만, 현재 당장 드러나 보이는 일부 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부정적 의견이나 평가를 포함하여 시민과 교육당사자의 여론에 대해 주시하면서 민주성의 가치 실현 뿐만 아니라 개혁의 실효를 위해서도 기 설정한 정책과제에 대한 진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원칙과 전략

김경희 교수께서 지적한 ‘세부 정책 수립·집행 시 고려사항’에 대해 공감하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원칙과 전략, 그리고 보완할 세부 과제’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가. 교육개혁의 내용: ‘개혁을 위한 개혁’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오직 교육의 원리와 기준에 따른 교육개혁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현재와 같은 교육공약 기반의 교육정책 형성 구조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설정할 때 새로운 영역에서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칫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될 수도 있다.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더 좋은 수단으로서 탐색·설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의 정상화,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의미로 시작해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의 이념과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의 교육개혁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정상화, 즉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차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들 수 있다.

(1)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법제화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수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곧,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교육격차 심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운영으로 인한 재정낭비’, ‘학생의 불편과 조기진로결정 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직 이 정책에 대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동아일보, 2022. 12. 30, 고교학점제 두고 오락가락 교육부… 학부모-수험생은 혼란).

(2) 실효성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해 보완할 필요

김경희교수께서 지적한 대로, 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의 이름과 지자체와의 연계라는 추진체에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취지나 목표, 내용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 투자를 수반했던 역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김경희 교수의 제안과 같이 지속가능성 보장, 성과관리 부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가진 한계에 대해 철저히 진단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교육개혁의 추진방식: 교육현장과 실제의 진단, 점진적 시행으로 접근해야!

교육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접근할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개혁과제의 설정과 집행의 과정은 1)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교육 요구와 수요 진단, 2) 교육현장의 문제 진단과 해결책 모색으로부터 시작하고, 3) ‘점진적’ 정책 개발·시행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교육개혁 아젠다의 발굴은 현재의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는 데서 출발을!

현재 산적한 교육문제를 놔두고 새롭고 이상적인 정책 방안을 고안·도입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산적한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개발하는 방식은 교육정책의 현실성, 적합성, 수용성 등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성공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정정길 외(2017, pp. 292-293)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문제해결중심의 접근은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동원형,’ 곧 여론보다는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 제도를 만드는 ‘전문가 및 정부 중심의’ 정책결정방식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유관집단의 저항을 불식시키고 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정책 개발·추진은 점진적 모형을 적용해야!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교육개혁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점진적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성숙한 관점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비책을 죽기보다 현재 도출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교육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의 수준 높은 관점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1) ‘점진적인 방식’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한 예로서, 대입제도개혁을 들 수 있다.

대입제도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런 정책일수록 급격한 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점진적 변화와 숙고를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능시험 폐지’ 등의 과격한 개혁안이 사교육비 문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단한 개혁안으로 언뜻 보일지는 모르나, 사교육 문제는 수능시험을 없앤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타당하고 공정한 선발제도의 대안으로서 수능성적이라는 전형요소가 아닌 그 외의 어떤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역대 정부를 지나오면서 대입제도개혁이 단연코 초점이 되어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의 대입제도로 정착되어 온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입제도에 대한 과격하고 성급한 정부의 개혁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절대평가화’를 골자로

하는 수능개편안(2021 수능 개편 시안, 2017. 8월)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교육문제에 대해 2년여에 걸친 ‘공론화’를 겪지 않았던가!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도 대입제도개편안은 그 이전의 대입제도로 회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대입개혁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동일한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2) 에듀테크를 통한 학교현장의 수업혁신 방안에 대한 숙고의 필요

성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학교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꼼꼼히 숙고해야 할 과제의 예로서, ‘AI 등 에듀테크를 통한 학교현장의 수업 혁신’을 들고 싶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바라보면서, 초·중등에서 ‘코딩교육의 확대’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기반(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여 ‘디지털 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디지털 교육의 기반(인프라) 확충’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해 그 기초적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반(인프라) 확충 외에는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 종이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새로운 수업혁신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업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수업혁신의 내용과 방법으로서 ‘디지털교과서에 어떤 새로운 내용과 방법이 담길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교육으로 설정할 학생의 역량에 따라 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이 작업은 교육시설과 설비의 디지털화 이전에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혁의 추진은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해야!

개혁의 실효는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개혁 아젠다의 발굴은 교육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개발에서 출발하고, 개혁과제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점진적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있는 교육개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2

교육개혁,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오세목 (前 중동고등학교 교장)



교육개혁,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오 세 목 (前 중동고등학교 교장)

■ 들어가는 말

발제자께서는 현정부 교육개혁의 기조를 되짚어 보면서,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회복, 자유도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회복으로 세계 일류 인재를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을 바로 잡고 낡은 교육제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회복, 평등주의 탈피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본 토론자는 교육학자가 아니므로 일선 고교 재직 중 나름대로 경험한 교육개혁 사례를 피드백하여 다음 몇 가지 논제들에 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취임사부터 최근의 미의회 및 하버드대 연설에 이르기까지 윤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키워드는 단연코 “자유”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바람 앞의 촛불이 되었다. 광우병 촛불 선동으로 불을 댕긴 광장의 세력들은 세월호 참사를 불쏘시개로 몸집을 불리고, 급기야 온갖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철부지 어린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끌어 들이려는 여러 시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목격되었다. 민주화를 외치던 곳곳에 반국가 세력들이 진지를 구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종북 주사파가 득세한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극악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김씨 3대 세습 독재정권도, 시진핑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도 인민을 앞세워 스

스로를 민주주의라 칭한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일 뿐”이라 했듯이, ‘자유’를 떼어낸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유리병에 불과하다. 나치의 히틀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일부 지도자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해체해 버린다. 세계 도처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시켰던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홍보 자료를 통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헌법 제69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헌법 제66조 제2항)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의 확고한 정체성 위에서 논의되고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지향점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에 부합한다.

■ 교육개혁 현장사례-중동고의 도전과 좌절-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역대 정부는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 교육정책을 펼쳐 왔지만 부작용이 속출하였고, 여전히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라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국정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였다. 교육 문제는 정답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논박이 예상된다. 여러 이익 집단들의 반발도 뒤따를 것이다. 특히, 교육을 자신들의 진지로 여기는 세력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당국이 주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용역, 공론화(위원회, 토론회),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교육정책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장시간이 소

요되고, 이 경우에도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정책들에 대한 절차적 포장일 경우가 허다하다.

토론자는 이러한 top down 방식이 아닌, 일선 학교 현장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맹렬하게 추진하여(bottom up)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개혁의 불씨를 던지려 시도했었던 중동고의 도전과 좌절을 피드백하여 몇 가지 논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 중동 신교육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1993.06.)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三星 新經營」
 -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 ⇒ 삼성「중동 신교육」TF팀 가동
 - “한국의 이튼스쿨을 만들자”
- (1994.12.) 삼성재단「中東 新教育」선언(=한국 중등교육의 시범장)
 - * 청와대 참모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모니터링을 위한 내교
 - * 첨단 선진 학교인프라 구축 계획→ 교육당국의 규제로 무산
 - ☞ “자립형사립고” 체제 도입 지속적 제안
- (1995.05.) 김영삼 정부 「5.31 교육개혁안」 발표
 - * 교육개혁위원회: 2003년부터 자립형사립고 도입 운영 보고
- (1998.02.) 김대중 15대 대통령 취임
 - * 김대중 정부 초대 이해찬 교육부장관
 - “시장원리 도입해 교육개혁 이루겠다”
 - “교육도 경쟁과 시장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2002.03.) 김대중 정부 「자립형사립고」 도입 운영 시작: 민사고 등
- (2009.02) 이명박 정부 출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자율형사립고 확대정책 시행: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 (2010.03) 중동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 (2014.0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고사전략 시작
 - ⇒ 자사고 측 10여 차례 행정소송 승소
 - 2차례 헌법소원 제기(일부 위헌 판결로 지위 유지)
- (2020.02)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존립 근거 삭제)
- (2022.05) 윤석열 정부 자사고 육성 공식화

■ 신교육의 주요내용 및 파급효과

- 참인간 교육(인성교육, 상벌점제, 개별·학교단위 봉사활동)
 - ⇒ 봉사활동 교육과정 도입(학생부 기록)→ 개인봉사 미인정
-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사 3행 3무 운동⇒ 교직문화 변화 기여
- 촌지없는 학교 선언(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김영란법으로 정착
- 교사 공개채용-인턴교사제 운영⇒ 인턴교사제 좌절
- 교사직급 체제 개편(선임, 수석교사제 신설)⇒ 수석교사제 실시
- 정의적 평가제 도입⇒ 수행평가제
- 진로교육(Who Am I?) 도입: 자아정체성 교육⇒ 진로교육 정착
- 보조 교과서 개발, 수준별 이동수업, 수업방법 개선⇒ 수업변화 촉매
- 체험학습의 날(책가방 없는 날) 운영⇒ 창체활동으로 발전
- Paperless School을 위한 자체 서버망 구축: Lionet
 - ⇒ 에듀파인(현재 학교행정시스템)으로 정착
- 선진 첨단 학교건물 신축⇒ 당국 규제로 무산
- 중동신교육연구소 설치, 교사 안식년제 도입 등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3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그룹의 경영진을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삼성「신경영」을 추진하였다. 이는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와 궤를 맞추어 삼성재단이 운영하던 중동고등학교도 한국 중등교육의 시범장임을 자임하면서『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한국의 이튼스쿨"을 만들자는 야심 찬 기획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중등교육계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숱한 개혁 과제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자,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다. 일부 과제는 우리 중등교육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현장에 일반화되고 정착되었으나, 한국의 이튼스쿨을 만들어 후일 세계적 인재들을 유치하자는 기획은 처참하게 좌절되었다.

좌절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학에 대한 통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평준화 정책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 삼성은『신경영』을 통하여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났지만, 교육은 여전히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다.

■ 자율형사립고 & 사학의 자주성

□ 자율형사립고 존치가 공식화되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하였다.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에 한해 사립학교의 본래 모습을 일부나마 복원시켜 주자는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사립 외고와 사립 국제고도 자율형사립고인 셈이다.

반자사고 세력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온갖 터무니 없는 프레임과 '닥치고 평등'을 외치며 자사고를 압박하고 고사시키려 시도하였다. 그나마 주어졌던 일부 자율권¹⁾마저도 박탈하였다. 자율성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일반고와 다름이 없으니 없애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일삼았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균등한 교육’은 국공립학교를 통한 공교육 기회의 평등을 말하며, ‘능력에 따른 교육’은 학생의 학습능력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기회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종전의 일률적인 ‘평준화 교육정책’은 ‘균등한 교육’에는 부합하나,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평준화 교육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즉 교육기회의 실질적 불평등의 발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및 보완조치로서 자사고 확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현재 2009. 4. 30. 2005헌마514; 현재 2012. 11. 29. 2011헌마827).

서울교육감의 경우, 자사고를 고사시키기 위해 무상교육 차원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각종 국고지원사업에서 자사고를 원천 배제시켰다. 이는 심각한 역차별로 서울 자사고들은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자사고 제도 복원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빼앗았던 자율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 ▶ 사비자 20% 선발을 강제한 초·중등교육법은 고쳐야 한다.
- ▶ 자사고 재학생에게 바우처(=무상교육 해당분)를 지급해야 한다.
- ▶ 고교체제는 법률²⁾로 정해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 학생 선발, 재정운영 자율권 등을 모두 박탈하고 통제와 규제 강화

2) 헌법 제31조제6항 학교교육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 명시

□ 사학의 자주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는 대략 중학교의 20%, 고교의 40%, 대학의 80%가 사립학교다. 학령인구가 팽창하고 국가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 정부가 당근책을 써서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유도하였다. “교육입국”을 외치던 시절 대다수의 독지가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정부정책에 동참하였다.

무상교육과 평준화를 빌미로 사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면서 정부가 사학에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등록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학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등록금을 세금으로 대신 내주게 되자, 정부는 이제 시혜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사학에 대한 국고 지원은 따지고 보면 사학이 아닌 학생·학부모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학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삼아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실로 삼았고, 급기야는 사학을 공영화하기에 이르렀다. 좌파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는 애써 쉬쉬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는 마치 모든 사학의 비리인양 프레임을 만들어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제는 인사권까지 박탈하려고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본권의 하나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현재 2001. 1. 18. 99헌바63)

또한,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은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의성을 북돋우어 교육을 다양화하고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국공립대학과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튼과 같은 글로벌 명문학교를 만들어 세계 도처의 인재들이 유학을 오도록 만들면 왜 안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평준화의 우물 안에서 봉어빵 교육만을 외칠 것인가?

■ 학교교육의 탈정치화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교육감 직선제를 틈타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치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어 왔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교사들의 빈번한 정치·이념 편향 교육 사례는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위 현장에 나온 한 여학생은 “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노동계급 혁명)”이라고 외쳤다. 부산에서 한 단체는 ‘주체사상’을 집단 학습하고 ‘공산당 선언’을 바탕으로 「도전 골든 벨」 행사를 치른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는 교실에 인공기를 걸어 두었다 논란이 되었다.

* 편향된 정치 이념 교육 사례

- 수업내용과 무관한 정치편향 막말 선동, 동영상 시청, 사실 왜곡
- 계기교육, 비교과 활동 시 다양한 형태의 편향 교육(인헌고 사례)
- 시험 문제 출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범교과 교육 및 과정중심 평가에 교사 개인의 자의적 이념 주입
- 독서활동 지도 시 정치 편향적인 도서를 활용하는 경우
- 혁신, 민주시민, 인권, 환경, 노동교육을 빙자한 특정 이념 교육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교육을 정치의 볼모로 삼으려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교육의 본질을 떠나 진영논리로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 지형을 확장하는 진지로 삼고,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고 의식화시켜 잠재적 우군으로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 헌법(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제6조제1항)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교육기본법(제14조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된다.”

좌경이념의 확산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일이

다.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간첩단 활동은 북의 적화 공작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뿐만 아니라 깊게 침투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즈음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발칙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될 것이다. 좌파의 역사공정에서 비롯된 역사 왜곡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성찰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탈 정치화는 시급한 문제이며, 좌경 의식화 교육은 반국가 교육폭력이나 다름없다.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하루속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당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정체성 교육 강화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교육)

- 「정치 이념 편향 교육 금지 매뉴얼」 마련
- 위반 교사 엄중 의법 처리
- 단위학교 학교장 책무성 강화
- 교직원 연수 필수 요목으로 지정

■ 맷는 말

오늘 토론에서 발제된 주제들이 교육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여서, 본 토론자의 경우는 개인적 경험의 관점에서 몇 가지 논제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한 일선 고교 현장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이 그토록 끈질기게 매달리고 불가역적 대못질을 해놓은 정책 중 하나는 “고교학점제”일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뢰밭이다. 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이란 쉽지 않은 길이다. ‘백년지대계’라 했듯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여러 이익 집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획일적 평등주의를 탈피하여 디지털·AI 대전환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음은 명확하다.

교육을 정치의 볼모로 잡으려는 세력들에 맞서 치열하게 논박하고, 올바른 담론을 주도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전력투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끝.

토론 3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권혁제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권 혁 제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1. 들어가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사회뿐 아니라 교육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플랫폼의 개발과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어 원격수업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였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결합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함께 챗지피티(ChatGPT)로 불리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교육에 도입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기에 발빠르게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언급하고,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의 세부 정책 수립·집행에서 보완할 사항, 교육개혁의 기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의 특징

발제자는 윤석열정부 역점 교육정책 방향으로 교육을 산업으로 보고 수요자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조,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을 확대하되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와 대학육성책임을 국가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 AI 등 에듀테크를 통한 학교현장의 수업혁신 도모, 규제혁신을 통한 대학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촉진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교육정책에 대한 정교한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체로 공감한다.

또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연구 검토는 필수적이다. 실제 최근 교육부의 교육정책 중,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힌 교원양성

시스템 개혁-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은 학교 교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수업이 바뀌어야 하고 교사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교사 임용에 영향을 받는 교대·사범대생들의 반대와 교육계의 반발로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¹⁾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검토 추진되었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3개월 만에 계획을 철회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정책 특히 각 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얹힌 교육 현안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을 탐색하고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 세부 정책 수립·집행에서 보완할 사항

발제자는 세부 정책 수립·집행에서 보완할 사항으로 역대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과 성찰 및 성과관리, 정치에 휘둘리지 말 것, 연관된 정책들 간의 정책 조합(policy mix)으로 정책 효과 고양, 현장과 소통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 한계점 인식, 국가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협업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함에도, 그동안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안정성이 깨지고 정치적 편향으로 시대 부합성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은 거듭되었다. 교육정책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야 하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여 성공한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처럼 현장과 소통하고 이해 당사자의 공감을 얻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할 법적 근거도 있으므로, 여기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교육정책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 비전 아래 계통적이고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함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동아일보(2023.04.22.)정부, 교육전문대학원 사실상 철회… 도입 발표 녁달만에

이 점은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하든 교육수요자들은 최소 5~6년 전부터 대학진학에서의 유·불리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대응하게 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윤석열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저항

발제자는 한국교육학회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정책 긴급 진단”, 포럼 사의재 주최 “윤석열정부 교육정책 평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 개혁 철회 요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 전국교수연대의 라이즈(RISE)·글로컬(Glocal) 사업철회 요구 등 윤석열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적인 입장을 저항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재정·교원 정원 축소 방침을 밝힌 점, 코로나로 강제 소환된 에듀테크 교육에 따라 기기 활용에 익숙치 않은 교사들의 어려움 가중, 무선랜·스마트기기 등 스마트스쿨 인프라 구축 미흡, 자격을 갖춘 정보·컴퓨터 과목 교사 양성 없는 초·중등 코딩 교육 강화 등의 현장 상황을 저항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이를 경청하고 재고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진보·좌파 진영은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비하여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그에 대한 빈도도 낮고 의견 개진도 다소 소극적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수·우파 진영도 포럼과 정책 개발,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과거 교육정책의 실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우수성은 적극 홍보 및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진보-보수가 함께하는 포럼과 토론에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5. 교육개혁의 기조

발제자는 자유롭고 공정하면서 다양성을 띠는 교육이 추구하는 원칙으로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향상, 공정한 경쟁으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으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먼저, 교육의 본질이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 학력을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육의 자유도를 높이는 문제는 더 신중히 접근되어야 할 문제다. 우주의 모든 현상(現象)은 본질적으로 보다 더 자유도가 보장되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교육에도 적용된다면, 가령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 준다면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 의무교육단계에서는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공교육을 책임지는 구조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발제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을 '혁신교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념 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 아닌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등을 대표적 청산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시험·숙제·훈육없는 3無 혁신교육을 학력중시정책으로 전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존치 및 자율성 확대, 사학의 자주성 보장, 올바른 역사교육, 제대로 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등 다섯 가지를 강조하였다.

먼저, 학력중시정책으로의 전환에서 제시한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은 정확한 학력 진단과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린 자유학기제의 전면 폐지 등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문제와 기초학력보장법을 학력향상지원법으로 대체하여 유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제시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교육활동 만족도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업 참관 없이 담임이나 교과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평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원들에 대한 보복적 학생 평가로 인한 신뢰도 논란, 전문성 신장 피드백 기능과는 무관한 5점 척도 평가방식으로 인한 결과 활용의 제한, 자유서술식 평가에서의 성희롱과 욕설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²⁾ 또 학교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진행을 위해 평가 관련 내용 심의위원회 소집·운영, 평가 준비와 학생·학부모에게 안내자료 및 교육활동 자료 제작 배포 등 교원에게 평가 제반 업무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학생·학부모들이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되고, 동료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교육 질을 높이는 제대로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 평가과정과 결과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일정 점수(2.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최소 60시간, 최대 6개월간 장·단기‘능력 향상 연수’를 받으며,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 특별 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7. 3대 핵심 개혁과제로 삼아 낡은 교육제도 선진화해야

가. 고교평준화 끝내고 고교선택제 도입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급선회한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체제 개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설계한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등 주요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착된 고교평준화 체제가 무너짐과 함께 대학서열화의 부작용이 고교서열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고교서열화는 고등학교 이전 단계의 사교육과 경쟁을 심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요소인 절대평가가 고교 서열체계와 결합하여 자사고·외고·국제고 쏠림, 특목고 간 양극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후기 일반고 배정방식에 있어 교육감 배정방식을 폐지하고 학교장 선발 전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일반고 내 서열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중학교 내신, 면접 등 경쟁이 심화할 소지가 있고, 지역 명문고가 새로운 형태의 고교 유형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25년 예고된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고교 유형의 다양성은 고교 형태의 다양성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으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학생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시별 공동학군(단일학군)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동의한다.

2) 조선일보(2023.01.26..) 교사 성희통한 고3, 졸업직전 퇴학

나.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진로형 수능의 도입

1) 수시모집 학생부위주전형 VS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학년도	수시	정시
2000	3.4%	96.4%
2001	4.9%	95.1%
2002	28.8%	71.2%
2003	31.0%	69.0%
2004	38.9%	61.1%
2005	44.3%	55.7%
2006	48.0%	52.0%
2007	51.5%	48.5%
2008	53.1%	46.9%
2009	56.7%	43.3%
2010	57.9%	42.1%
2011	60.9%	39.1%
2012	62.1%	37.9%
2013	62.9%	37.1%
2014	66.2%	33.8%
2015	64.2%	35.8%
2016	66.7%	33.3%
2017	69.9%	30.1%
2018	73.7%	26.3%
2019	76.2%	23.8%
2020	77.3%	22.7%
2021	77.0%	23.0%
2022	75.7%	24.3%
2023	78.0%	22.0%
2024	79.0%	21.0%

2024학년도 대학입시는 모집시기를 기준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고,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수능전형으로 나누어진다. 수시모집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지만, 2019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사고와 조국사태로 수시모집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2021,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그동안의 수시모집 확대 기조에서 주춤했던 양상을 보여준다. 발제자는 수시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은 공정성이나 학생·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집중된 언론보도 등으로 극히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로 판단된다.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일 또한 2019년 11월 28일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로 정리되었다.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여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기재,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 엄정 조치 등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또 대학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통해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부 위주전형은 결과뿐 아니라 수업의 과정을 기록함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학생중심 수업으로 전환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역량을 이끌어내고 공교육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고등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일차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을 매개로 수시모집 학생부위주전형을 축소하고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2) 문·이과 통합수능의 문제점과 수능 개선

2015개정교육이 적용되는 현재의 수능은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경계를 폐지하여 17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수학은 수Ⅰ과 수Ⅱ를 공통과목으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 수능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 매체 134점, 화법과작문 130점으로 4점 차가 났고,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미적분 145점, 확률과 통계 142점으로 3점 차가 났다.³⁾ 같은 만점을 받아도 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최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수학 1등급 표준점수 133점은 국어 1등급 표준점수 126점보다 무려 7점이 높고 1,2 등급을 대부분 이과생들이 차지하여 ‘문과침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와같이 현재의 수능은 교육과정과 불일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도·농 지역 간 격차, 출제 오류, 과다한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 당일 컨디션에 따른 변수,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사교육과 컨설팅 증가, 교육적 가치 없이 오답을 유도하는 퀄리문항, 추측이나 우연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가능성, 연습과 반복효과가 가장 뛰어난 시험, 재수로 인한 기회비용 증가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2022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과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시 정시 통합이다.** 수능을 약 2주 정도 앞당기고 전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여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것이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전형 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시모집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고, 교육과정도 파행으로 운영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는 ‘수시 납치’라는 현 수시, 정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정시모집의 가, 나, 다 군의 구별도 없어져 동일군 내 대학을 선택할 수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2023.12.0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있으므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더구나 학생은 자신의 수능성적을 확인한 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 지원함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경쟁과 매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형 기간이 줄어들어 대입전형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 결과 발표를 동시에 하고 한 개 대학에 등록하게 하면 중복 합격에 따른 충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 조정, 전형 기간 단축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 대학별고사 일정이 겹치는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생 수 급감, 유튜브, ChatGPT, 무크(MOOC),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와 같은 대체 교육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 충원 위주의 대학과 선발 위주의 대학으로 나누어지고 수능의 영향력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해 가고 있다. 현재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국어, 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제를 도입함으로 통합교육의 근본 취지와 달리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문과침공’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수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발제자가 제안한 수능 I과 수능 II의 진로 선택형 수능에 적극 동의한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수능 I과 학생의 대학 전공에 맞추어 응시하는 수능 II로 분리하되 수능 I은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언어·수리 능력 등 기초수학능력을 측정하고, 수능 II는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로 대학이나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 주로 입학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논술형 문항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 I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공정한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산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 국가 수준의 수능으로 제한된 것에서 벗어나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완전한 입시 자율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대학은 국가 제도에 의지 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학 인재상을 확립하고 수학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역량 개발과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교원 인사·보수체계의 개혁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고, 앞으로도 교육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교육의 중심에는 늘 우수한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우수 학생들이 지원하는 교대 입시에 합격선·경쟁률이 모두 하락하는 일이 일어났다.⁴⁾

여기에는 수험생 감소, 교원 수 감축에 따른 임용의 어려움, 단일 호봉의 봉급 체제, CCTV 관리·강사비 계산·계약제 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비본질적 행정업무, 아동학대·학교폭력을 비롯한 생활지도, 교원 전문성 신장보다는 인기 평가에 가까운 교원 능력개발평가, 측정 불가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 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차등 성과급제, 과밀학급, 복식학급, 상치교사, 순회 교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호도가 점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 인사·보수체계의 개혁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교원에 관한 평가, 전보 등 인사제도와 보수, 수당 등 보수체계를 재설계하여 교사 처우 개선 및 사기 양양으로 무너진 교권과 교실을 회복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이다.

8. 나가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여기서 다루지 못한 유보통합, 늘봄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고교학점제, 2022개정교육과정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정책(上政策) 하대책(下對策)’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낼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정치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미래세대가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4) 서울신문(2023.04.26.) 교대 정시합격선 최고 25점 ‘뚝’... 정원 축소 맨 인기 더 떨어지나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